

데스크시각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있다. 주변 상황이 좋을 때 힘을 모아 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 호남이 그런 상황이다. ‘호남 패산’으로 일관했던 9년 동안의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이 막을 내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제3기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호남의 열렬한 지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 전반에 호남 인맥을 적극 중용, 보수 정권에서 쌓았던 호남의 환과 갈등을 풀어 주고 있다. 또 100대 국정 과제에도 호남 현안 사업들을 대거 포함시키는 등 호남 미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호남의 또 다른 강력한 카드다.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원내 3당의 국민의당은 당국제 구도에서 국회운영의 키를 쥐고 있다. 국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는 국민의당의 협력 없이는 여권의

호남 역량 결집이 관건이다

국정 운영은 쉽지 않다. 국민의당이 여권을 압박하며 호남의 미래를 견인하는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 구도도 호재다. 호남과 여권은 사실상 공동운명체다. 호남이 흔들리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국정 운영 동력이 붕괴된다. 국민의당에게 호남의 지지는 ‘생존’ 그 자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치열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쟁 구도는 호남의 현안 사업 해결과 비전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더할 나위 없는 황금 구도에도 호남의 미래는 순조롭지만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근 10년 만에 물이 들어오고 당국제와 경쟁 구도도 조류와 바람도 좋은데 호남의 비전을 담은 배가 좀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역량 결집이다.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호흡을 맞춰 노를 저어야 하는데 이렇지 않다.

당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호남 사업들을 선연식으로 펼쳐 놓고만 있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기존의

친환경 부품 클러스터 조성, 광주형 일자리 등은 물론 대선 공약인 한전 공대, 스마트 시티, 에너지 밸리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 부처도 호남 현안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광주·전남 지역 국고 예산은 SOC 분야가 대폭 삭감되고 신규 사업 예산도 ‘절감 반영’에 그쳐 정기국회에서 대폭적인 조정이 필요할 실정이다.

하지만 이를 풀어야 할 정치권은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호남 국회의원이 3명에 불과한 민주당에서 호남 현안을 꼼꼼하게 챙기는 인사를 찾기 힘들다. 5일 열린 예정이었던 민주당과 광주시의 첫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현역 의원은 백재현 예결위위원 단 한 명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국회 일정으로 전격 취소됐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의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호남 특위를 구성하며 부산을 떨던 때와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최근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면서 여권이 호남 민심에 대해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말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도 호남 현안과 관련, 여권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내년 SOC 및 농업 예산 등을 두고 각을 세우

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된 호남 현안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점검, 강력한 정치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남의 미래를 위한 치열한 투쟁 없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의 생존은 장담할 수 없다.

서 말 구슬도 꿰어야 보배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의 활동도 미진하다. 정치권과의 물밑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제시하고 풀어 가기보다 정부의 눈치를 보는 데 그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한전 공대 건립, 제주 해저 터널 등 광주·전남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비전과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정부 시절, 고(故) 김대중 대통령은 “호남에 지원을 하려고 해도 구체적 사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탄했다고 한다. 이 같은 과오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호남의 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호남의 역량 결집이다. 여야와 지역적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를 위해 지혜를 모으는 호남의 각성과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은편칼럼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 진위와 상관없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종착역에 도달했다는 느낌이다. 북한의 수소탄 시험에 맞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 발언도 예상롭지 않다. 게다가 야당은 연일 문재인 정부에게 더 강한 대책을 요구한다. 또 이를 기다리더라도 한 톨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국의 전술핵을 남한에 배치하지는 방안을 보다 직접적으로 피력했다. 일본도 이 기회에 핵개발 혹은 군비강화를 목표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가 핵

북핵 위기의 해법은 일괄타결론 뿐이다

화학교로 변모해갈 조짐이 보다 농후해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핵무기는 인류를 재앙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사용될 것 같지 않지만 1945년에 이미 한번 사용되었다. 소련의 체르노빌 및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처럼 핵무기도 우발적인 사고를 가상할 수 있다. 미국은 핵무기를 보유하는데 왜 북한은 보유해서는 안 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관념적 민족주의나 과도한 진영논리에서 나온 위험한 발언이다. 북한은 합리적 의사 결정구조가 결여된 나라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선제타격 혹은 핵개발로 북한 핵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도 바른 해법은 아니다. 선제타격은 곧 전쟁을 전제로 한다. 북한 핵도 위협하지만 가상의 위협을 구실로 실제 전쟁을 유발해 수백만 국민을 죽이고 온 국토를 폐허화시키는 것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겠는가? 남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 전술핵의 남한 배치도 임시 방편책은 될 수 있을지 모르

지만 근본적 해법은 되지 못한다. 그냥 ‘감 대 감’으로 대치하며 위기를 연속화시킬 뿐이다. 핵이나 전쟁이 아닌 오로지 평화만이 근본적 해법이다.

북한이 핵개발에 몰두하게 된 원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3대 세습과 폐쇄정책으로 인한 국가 경영의 실패이다. 둘째는 미국과 남한의 봉쇄정책, 그리고 중국·소련(러시아)과 남한의 수교에 따른 극도의 고립감이다. 셋째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 남한과의 재래식 군비경쟁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게 된 점이다.

북핵위기의 해법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개발하게 만든 원인들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찾아야 한다. 당연히 해법의 일차적 단계는 북한 봉쇄정책을 해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을 승인하고, 과거 제1차, 2차 북핵위기 때 미국이 북한에 행한 약속들을 이행하며 상호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물론 반대파들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 개발을 중지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북한이 미국과 주변 국가들에 갖는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접근법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계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논쟁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미국은 더 이상 남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당장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지금 남한 정부와 정치권은 미국 따라가기에 바쁘다. 그래서 안 된다. 전쟁이 발생하면 그 직접적 피해자는 미국이 아닌 바로 우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되 우리가 능동적으로 북핵위기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북핵위기의 해법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시했던 일괄타결론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중지하고, 미국은 북한과 수교하고, 남한은 경제적으로 북한과 적극 협력하여 공존공영하는 것이다. 북한의 지금까지의 핵개발 과정은 이미 앞질러진 물이다. 지금 할 일은 그 앞질러진 물을 다시 즉각 주워 담으라고 으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더 이상 앞질러지지 않게 하면서 차근차근 상황을 수습해가는 것이다. 역사를 배우는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기 위해서이다. 위기 때마다 좌우로 나뉘어 양극단을 주장하면서 분단을 고착시킨 것과 같은 잘못을 다시는 범하지 말자.

기고

역사와 문화, 근대건축을 활용한 도시재생

원을 투입하여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차장, 어린이집, 무인택배시설 등의 주민 편의 시설 지원을 통해 구도심의 가치 향상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물론 선거기간 중에 이미 이러한 내용이 공약으로 제안된 바가 있는데 이제는 국가 뉴딜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기대와 격정이 앞선다. 그것도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투입된다고 하니 마치 지난 정부에 시행하였던 4대강 사업과 문화융성시 퍼올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도시의 역사는 인간처럼 너무나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교통, 주거, 환경, 복지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팽창하였다.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현대도시의 성장구조를 보면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간적으로 확장되어 당연히 인프라가 좋은 신도시 쪽으로 인구가 이동하고 집중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의 공동화를 조래했고 이로 인해 도시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본가에 의한 주거의 공급은 오히려 수요를 만들어내는 기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도심 공동화현상은 더욱 가중되었다.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상세계를 꿈꾸는 자들에 의하여 많이 논의되었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토마스 무어는 이상도시 왕국 건설을 통해 당시 영국의 사회경제적 병폐와 종교적 자유 및 개방화 되어가는 유럽 경제체제에 대한 경제적, 공유사회적 유포리즘을 제시하였다. 그의 유포피아적 도시구조와 운영원리는 자족성, 도농통합, 인구통제, 건물 내부에서의 공동체 생활, 토지이용 분리 등이며 이러한 상당수 논지는 근대 도시계획으로 계승되었다.

하위드는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지역에 전원과 도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자족적인 도시 건설이 황폐화된 도시를 개선하는 유일한 대안이라 하였다. 건축가 라이트는 브로드웨이커 시티라는 이상도시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중심지가 없는 도시에서 학교와 그 주변은 일종의 공동체센터 역할을 한다. 학교 주변에는 화랑, 공연장, 강연장, 작은 공원이 마련되어 있다. 에너지는 전기, 석유, 가스인데 공동구에 의해 공급된다. 주민과 가까운 작은 정부, 개발을 제한하는 그린벨트 기능의 수목대도 있다.

현재 세계적인 도시화 추세는 50%를 넘었고 점차 10여년 후가 되면 약 75%에 이를 것이라 한다. 도시는 오랜 세월 동안 길과 건물, 식생과 사람들이 어우러져 생성

되고 변화하는 공간이다. 그런 공간을 완전히 평탄하게 깎고 쌓아올린 도시는 그 도시가 남아 생명력을 잃을 때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생명력은 사람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것으로 회복된다. 직장과 교육과 주거가 우선 함께하고 사람과 역사적 전통, 일상적 문화가 어우러져야 한다. 더욱이 장소에 대한 애정과 인식이 이어져갈 때 도시는 재생되는 것이다. 어떤 곳이었는가에 대한 살림이 우선해야 하고 기능보다는 지역인의 삶을 어떻게 편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난 시대의 역사적 장소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그 성공을 입증한 사례가 많다. 최근에는 근대건축이나 역사적 장소도 그 몫을 크게 하고 있다. 인천과 부산, 군산 등은 일제강점기의 항구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도 철도청 옛 관사를 활용한 구도심 활성화 과업이 진행 중에 있다. 대구는 근대로의 길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통영은 벽화로 거듭 태어난 마을이 되었다. 이들 이외에도 소금창고와 골목길, 골목과 고가수조, 터널, 교도소, 탄광 등 주제는 너무나 많다. 광주 역시 다양한 근대유적을 문화라는 매개체로 구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와 역량이 있다. 다만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사라져 버린 가까운 과거의 흔적들이 아쉬울 뿐이다.

社說

역대 최장 황금연휴에 밥 굶는 이웃 없어야

연휴에 달하는 추석 연휴로 상당수 국민이 해외 관광 등 가족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벌써부터 휴가 계획을 짜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끼니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2만여 명의 광주·전남 지역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은 자칫 배고픈 명절을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연휴 기간 결식아동들이 이용하는 식당들이 거의 문을 닫고, 독거노인 식사아동에게 밥자랑카드(4000원)를 나눠 주어 급식 지원 가맹 식당·분식점·편의점 등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독거노인은 점심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다.

광주·전남의 급식 지원 대상 아동은 2만 명에 달하는데, 연휴 기간에 관련 음식점들이 문을 닫으면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노인들도 그동안 복지관 등에서 배달해 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지만 연휴 기간에는 배달 서비스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는 연휴 기간 직접 먹을 수 있는 대체 식품이나 식품 재료를 구입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이번 연휴는 특수 상황인 만큼 결식아동들이 지정 식당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도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카드 대신 현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독거노인 도시락은 동 주민 센터나 자원봉사센터가 주축이 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연휴 기간 한시적 자원봉사자를 모집, 독거노인 한 명당 자원봉사자 1~2명을 지정해 도시락 봉사를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연휴까지 3주밖에 남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없다. 시·도는 불우 이웃들이 민족의 명절인 추서에 밥을 굶는 일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 복지 개선 시급하다

2만여 명에 달하는 광주 지역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이 장기에 걸병에 시달리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간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포함해 혼자 사는 가구가 많고 그나마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인 탓이다.

광주시의회가 최근 실시한 ‘광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자 실태조사’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광주 지역에는 광주시가 운영하는 시영아파트 3곳과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 8곳 등 모두 11곳에 1만392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입주자의 80% 이상이 법정 빈곤층이었고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

게다가 대부분의 아파트가 건립된 지 30년이 다 돼 노후된 데다 실내 주거환경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홀로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다. 출입구 입구와 내부의 높이 차이가 커 전동휠체어가 한 번에 들어가기 어려웠고, 비좁은 화

장실에는 낙상을 예방하는 안전바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여기에 홀로 사는 가구와 노인 비율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난 2012년 40%였던 1인 가구 비율은 5년 만에 65%로 치솟았다. 주민 대다수가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자녀마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어 ‘가난의 대물림’도 심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민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죽음에 이르는 ‘고독사’도 빈발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조성한 영구 임대아파트가 질병과 가난, 고립에 둘러싸인 ‘도심 속 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영구임대들의 사회적 고통이 더 이상 심화하지 않도록 주거복지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복지 인력을 늘리고 방문 건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노후 건물 리모델링과 휴식 공간 조성 등 주거환경 개선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선 선조 때 재상(宰相)을 지낸 류성룡은 임진왜란이 끝난 뒤 ‘징비록’(懲毖錄)을 편찬했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이전의 대일 관계를 비롯해 전란이 일어나 원인과 전황을 기록한 책이다. 집축했던 전쟁을 회고하고 여러 실책을 반성하며 후세가 앞날을 대비하는데 교훈으로 삼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징비’는 중국 최초의 시가집인 ‘시경’ 소비편(小苾篇)의 ‘내가 징계해서 후환을 경계한다’라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게 ‘징비 정신’인 것이다.

하지만 전란 후 조선 사람들은 징비록을 거의 읽지 않았고, 오히려 가해자인 일본은 징비록을 책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이 읽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이 끝난 뒤 300여 년이 지난 1910년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는 치욕의 역사를 맞았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명지대 사학과 한명기 교수는 역사 강의를 통해 “한·일간 외교적 전란이 생길 때 일본에 밀렸던 이유는 과거를 기억하고 현실을 철저히 분석하고 미래

에 대비하는 ‘징비 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조선 인조 때 발생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원인도 주변 국가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외교적 실책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이 군신 관계였던 명나라와의 외교에 치중하면서 신성 국가인 후금(청)을 무시한 탓이 컸다는 것이다. 조정의 외교적 실책이 불러온 두 차례의 호란은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는 등 몰척·인척 피해를 불러왔다.

그러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게 ‘징비 정신’인 것이다. 러한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 패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한반도 관련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말이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미국과 일본의 혐의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한 반도 사드 배치로 중국과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징비 정신’을 다시 한 번 새겨 볼 때가 아닌가. /최권일 정치부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